



농업분과

한미 양국은 7월 10일(월) ~ 14일(금)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2차 협상을 진행했다. 우리측에서는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한 외교부, 농림부를 비롯한 24개 부처, 16개 국책연구기관 소속 270여명이 참석했으며, 미국에서는 웬디 커틀러 USTR 대표보를 수석대표로 16개 부처 80여명이 협상에 참여했다.

한미 양국은 1차 워싱턴, 2차 서울에서 FTA 협상을 가졌으나 농업분야는 별다른 합의사항을 도출하지 못한 채 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농림부는 이번 2차 협상에서 농업분과와 위생 및 검역(SPS)분과 협상을 총괄하고, 이 외에 원산지 분과, 상품분과, 서비스 분과 등 농업 관련 사안이 논의되는 분과 협상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입부과금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G), 수입쿼터(TRQ) 제도, 수입부과금(MARK-UP) 및 농산물 양허안의 기본골격에 대해서 한국은 관련한 국내제도를 설명하고, 미국은 자국의 복잡한 관세체계를 중심으로 다자 및 FTA에서의 수입쿼터 관리 및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운영 현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협상에서 수입한 농산물에 대해 가격차에 따른 이익을 정부가 걷어들이는 이른바 수입부과금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가 농해수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은 수입부과금 등 다양한 수입쿼터 관리방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수입쿼터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국영무역을 배제하고 수입부과금을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 양허안

양국은 2차 협상에서 품목별 양허안을 교환할 예정이었으나 실패하고 양허안의 기본골격에 대한 논의만 진행했다고 한다. 양허안의 기본골격과 관세를 철폐하는 유형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

세철폐기간에서 우리나라는 관세즉시철폐, 단기철폐, 중기철폐, 장기철폐, 예외 등 5가지 유형을 제시했으나 철폐시기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양허안 작성에 대한 기본원칙 합의 없이 각국이 입장에 따라 작성하여 양허안을 8월 중 일괄 교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7월 20일 박홍수 농림부장관과 김성진 해수부장관으로부터 한·미FTA 2차협상 결과를 보고받았다.

위생·검역(SPS)분과

이미 지난 1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SPS(위생 및 검역조치) 기준을 WTO(세계무역기구) 기준에 따르고 SPS 관련 분쟁은 FTA상의 분쟁해결 장치에 회부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차 협상에서 미국은 1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구성을 촉구한

<한미 FTA 2차 협상결과>

결과	쟁점	내 용	비 고
대립	농산물	- 양허안 틀 마련 무산 - 쌀 개방 여부, 국영무역 시행,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에서 이견	- FTA 협상 최대 난관
	의약품	- 건강보험 약가책정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 이견	- 2차 협상 최대 난제로 부각
	섬유	- 원산지 규정에 대한 논란	- 미국의 수세 분야
	위생검역(SPS)	- 협정문 작성,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이견	- 미국은 분쟁해결기구 설치 주장
	투자	- 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한 이견	- 한국은 세이프가드 도입을 주장
	자동차	- 현행 한국의 배기량 기준 세제에 대한 논란	- 세제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의 주장
	통신	- 기간산업 외국인 지분 제한에 대한 시각차 존재	
일부 합의	상품	- 5단계 양허안 틀에 합의	- 즉시, 3년, 5년, 10년, 기타
	금융	- 신금융 상품별 감독당국 허가제 적용 합의 - 국경간 거래에서 소매금융 제외	
	서비스	- 유보안 교환	

반면 한국은 접촉창고만 두자는 의견으로 평행선을 달렸다. 우리측은 접촉창고만 둘 경우 기존 검역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미국 측 요구대로 위원회를 둘 경우 주기적으로 회의가 명문화되고 여기서 검역 관련 주요 현안을 다뤄 또 다른 통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구성을 반대하고 있다.

1, 2차 협상과정에서 농업분야는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농업분야와 관련해서는 1차 협상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며 한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미국측의 거센 공세를 막아내는데 급급한 모양새다.

○ 수세에 몰리는 FTA 찬성론

한미 FTA를 타결하기 위해 4대현안을 미국에 조공으로 바치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42억원을 쏟아부어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NAFTA의 폐단을 감추려 하는데 급급했던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정부의 실상이다. 이제 정부가 국민에게 거짓 선전했던 내용들이 하나둘씩 그 실상을 드러내면서 한미 FTA 반대여론은 높아만 가고 있다. 이는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반대여론이 70% 이상이 되면 협상 체결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아마도 정부는 애간장을 태우고 있을 것이다. 참여 정부의 명운이 걸린 일인 낭 선전하던 한미 FTA라는 시소가 반대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중훈 수석대표는 양허안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개방으로 손해를 볼 사람들의 반대가 우려돼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실직고 했다. 그만큼 피해가 산업별로 명확히 나타나며, 반대여론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는 농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한미 FTA 정보공개 청구’를 정부가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위기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위기감을 느껴서일까? 정부는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친FTA 진영’을 총결집 하는 ‘한미 FTA 지원위원회’를 설립운영하기로 밝혔다. 이로써 친FTA 진영과 반FTA 진영의 대립양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상되는 쟁점들

3차 협상에서 양허안을 교환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는 것이 서로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8월중에 양허



안을 교환키로 했으며, 9월에 있을 3차 협상에서는 이를 기초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TPA일정에 얽매어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정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듯하다. 오히려 정부가 미국 TPA일정에 맞춰 공손히 협상을 진행해 가고 있는 형국이다. 위에서 지적한 듯이 ‘정보공개 문제’, ‘한미 FTA 지원위원회’ 등의 쟁점이 형성되어 있다. 또한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협상공개와 함께 품목별 피해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한미 FTA에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미사일 문제이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9월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와 ‘안보’를 놓고 벌이는 ‘빅딜’의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경색되 가는 남북 문제에 FTA가 양국을 저울질하는 무게추로 쓰일지도 모른다는 의견이다. 즉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지원 중단으로 위기에 몰린 한국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곧 FTA라는 것이다. ‘안보’라는 명제를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문제를 협상의 수단으로 삼게 될런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판단이다. 따라서 범국민에서는 한미 정상회담과 FTA가 같은 시기에 열린다는 것에 각별한 주의와 환기가 필요하다.

○ 되짚어 보자

노무현 정부가 농민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의 “한미 FTA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FTA를 강행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막연하게 쌀은 지키겠다는 말 한마디로 갖고 예상되는 피해를 감내하고 말이다. 쌀 개방 문제는 이미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국내소비의 8%가 이미 열렸다. 미국이 그 중의 상당량을 할당량으로 가져갔다. 그러함에도 미국은 협상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터무니없이 쌀을 포함한 예외없는 농산물 개방을 주장하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쌀은 예외로 하자”라는 선심성 전략을 구사하면서 다른 분야와 축산물에서 대폭 양보를 받아내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다분하다. 정부는 쌀을 지키는 것이 마치 FTA 농업분야의 최대 과제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은 그것이 더 이익일 테니까.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협상 분위기는 한국이 미국에 제안한 주요한 요구들 가운데 미국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은 없고, 오로지 미국의 요구 수준을 낮췄다든가 수용했다는 식의 얘기만 들릴 뿐이다. 미국에 대해 제기하는 요구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요구를 누그러뜨리고 방어하기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라 분석된다.

협상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않기로 양국이 합의한 상황인 지라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협상이 오가는지,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얻어오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들만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측은 수세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것, 대한민국호의 방향타가 잘못 설정되어 위험한 항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